

# “홍역이 후진국병? 우리 아이 예방접종 서둘러야 할까요?”

생후 0~5개월은 MMR 백신 접종 안돼  
만 1세 미만 영아에겐 예방효과만 있어  
면역 위해선 13개월 이후 2회 접종해야  
동남아서 유행 중...미국·프랑스도 유행

홍역 환자가 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문의가 예년보다 늘고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혹여 내 아이가 홍역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국가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홍역 예방접종(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건수는 13만245건에 달했다. 10만건 정도였던 지난해 1월보다 3만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감염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 등에서 유행 지역에 살지 않거나 해외 여행을 앞둔 경우가 아니라면 침착하게 예방접종 시기를 기다려도 된다고 조언한다.

홍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달리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예방접종률이 높아 한사람 한사람이 ‘감염 정백’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한 살도 안 된 영아에겐 백신 효과도 떨어진다.

홍역이 이른바 ‘후진국 병’이란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10~12월 미국 뉴욕주에선 홍역 확진자가 152명이나 보고

됐다. 프랑스에선 2017년 12월18일 이후 1년간 2902명, 이탈리아에선 지난해 11개월간 2427명이 홍역에 걸렸다. 이들 나라가 홍역을 앓은 건 후진국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이 주요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등 설명을 토대로, 홍역을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홍역 유행지역에 살고 있다. 4개월 영아를 뒀는데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할까.

-12개월 미만 영아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홍역 항체로 인해 백신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성질(면역 원성)이 떨어진다. 국가 예방접종 표준 1차 접종 일정이 생후 12~15개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다. 면역력이 없는 0~5개월 영아는 아예 접종이 불가하

다. 따라서 유행지역 거주자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유행지역엔 표준 접종 일정보다 빠른 가속 접종을 권하되.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경기 안산시 등 집단 유행이 발생한 지역에선 생후 6~11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예방 차원이다. 12개월이 안 됐다면 면역원성은 떨어진다. 1세 이전에 예방백신을 맞았다면 이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총 3회를 접종해야 면역력이 생겨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홍역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는데 예방접종 시기 앞당겨야 할까.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홍역 확진자는 38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이후 2차 감염에 따른 집단 홍역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17명)와 경기(12명) 등 2개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안양·부천, 전남 인천 등 9명은 각기 다른 나라 해외여행 등을 통해 홍역에 걸렸다. 대한소아과학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지역 분포와 환자 수를 미뤄 볼 때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집단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단 발생 이외 지역에선 소아에게 가속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받을 것”을 추천했다.



▶홍역 유행지역 방문 땐 성인도 예방접종 필요할까.

-MMR 백신 접종이 금기시 되고 합병증 위험이 있는 면역저하자나 임신부(모유 수유자는 MMR 백신 접종 가능) 등은 홍역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967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자연 항체가 있다고 간주하고 MMR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태어난 성인 가운데 홍역을 앓은 경험이 없거나 MMR 백신을 1회만 맞았다면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하는 게 좋다.

▶해외여행 땐 왜 가속접종을 포함해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건가.

-유행 수준이 다르다. 확인이 진

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진단된 홍역 유전형은 해외 유입형이다. 베트남과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주로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바 이러스 유전형인데 최근에는 미국 여행을 다녀온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유전형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기준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을 홍역 유행 국가로 분류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국가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 가운데 생후 6~11개월은 가속접종, 만 1~12세 유아와 성인은 2회 접종(4주 간격)을 권고한다.

▶언론에서 홍역을 후진국병이라고 부르는데.

-영양과 위생 상태가 나쁜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흔히 후진

국형 질병으로 부른다. 우리나라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로부터 퇴치국가 인증을 받았기에 홍역을 과거 질병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홍역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뉴욕주에선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환자 152명이 보고됐다. 이스라엘로부터 유입된 바 이러스가 확산된 경우인데 접종률이 확인된 102명 중 85명(83%)이 미접종자였다. MMR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은 대부분 국가에서 홍역이 발생했다. 프랑스에선 2017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16일까지 2902명이 감염됐는데 1세 미만 어린이와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가 다수였다. 이탈리아 확진자 2427명(지난해 1~11월)의 90.6%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 홍역 불안에 ‘이방인’ 혐오 온라인 창궐... “잘못된 비난”

전문가들 “편견·배타성 사회적 악자 탓 하는 것”

“다문화가 문제다.”, “이래서 난민이나 외국인(외국인 노동자)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제발 쫓아내라.”

최근 홍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라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혐오도 덩달아 고개를 들고 있다. 홍역이 선진국에서는 자취를 감춘 일명 ‘후진국병’으로 분류된다는 게

그 근거다. 이 같은 이유만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한국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포털사이트의 홍역 관련 기사에는 “홍역이 생긴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같은 못 사는 나라(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는

댓글(네이버 아이디 ims\*\*\*\*)이 달렸고 이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람만 전날 기준 1200여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 때문에 후진국 병이 지구 들어온다”(네이버 아이디 fbs\*\*\*\*) 등의 댓글이 달렸다.

날로 기세를 더하는 미세먼지에 같은 반응이 눈에 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이 거론되자 온라인에서는 “서울에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오염되고 있다”(트위터 아이디 @tez\*\*\*\*), “(중국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인간들이다(네이버 카페 네티즌 ‘초보조\*\*\*\*’) 등의 혐오성 댓글이 줄을 잇는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젊은 여성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몰아 따돌림을 하던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당시 이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여성혐오에 대한 반발로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가 탄생하기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집단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세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홍역이 실제로 후진국병이더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진짜 중국이라고 해도 국내 소수자이자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약자를 향한 공격성을 드러낼 기회를 노리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라며 “꼭 외국인이나 여성이 아니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권력지향적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뿐 아니라 성소수자, 폐

미스트 등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주류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고 한정됐다”며 “타자를 포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사회에서 무엇이든 원인을 찾아내 비난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같다”며 “충분한 근거나 확인 절차 없이 원인제공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은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